

연말 국회 ‘安 탈당 쓰나미’

정계특위 빈손 마감...쟁점 법안 野 내홍에 협상 추동력 없어 정의화 의장 선거구 확정 직권상정 시사...쟁점 법안은 “NO”

여야가 대립하며 지지부진한 선거구 확정과 주요 법안 처리가 제1야당의 분열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할 안철수 의원의 정치세력이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할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은 두 야당을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하는 형국이 되 협상 방정식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계특위) 빈손으로 활동 마감=정계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선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선거구인원에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계특위는 그러나 활동시한을 하루 남긴 이날 전체회의에서 ‘핵심 업무’인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하고 결론 도출에 실패한 채 27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여야는 여러 차례 지도부 회동에서도 구체적인 확정 기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여기에 안 의원의 탈당이 변수로 더해졌다. 추가 탈당 의원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현역 의원 20명만 확보하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협상의 한 축으로 참여하게 된다. 양자 협상에서 3자 협상구도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 지역구 다 없어진다”며 “그것은 입법 비상사태로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는 해 넘길 듯=연말 입시

국회의 주요 법안 협상에서도 안 의원의 탈당은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등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안 의원의 탈당 등으로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면서 여야 협상 추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안 의원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여야의 협상은 3각 구도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 선

명성 경쟁, 주도권 경쟁이 점화될 경우 쟁점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교섭단체가 나타나면 새누리당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두 야당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의원의 탈당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해달라는 요구에는 거듭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1일 이후엔 여러분 지역구 없어져요”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14일 선거구 확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방문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정 의장은 면담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정치, 뒤늦게 ‘安 혁신안’ 반영

4개항 당헌·당규 포함...시행세칙 논란 예상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10대 혁신안’ 가운데 일부를 당헌·당규에 포함시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윤리심판원 확립 ▲부정부패 연구자 당원자격 정치 ▲유죄 확정 당원 제명 ▲일직 있는 연합·연대 명문화 등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시행

세칙은 최고위원회로 위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부정부패의 정확한 범위와 함께 유죄 확정, 과거 확정 판결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과거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주류 진영에서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으로 비주류 진영 길들이기

에 나서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비주류 ‘구당모임’ 간사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비대위를 구성해서 면모일신하고 통합해서 가야 한다”며 “해법을 찾지 않고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다 죽는다”며 문 대표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을 따라 탈당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비주류 진영의 강정일 의원은 “이 당이 문재인-안철수의 개인 사당이 아니며 새우 싸움에 고래 등이 타지고 있다”고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에 주류 진영의 강기정 의원은 “일단 문 대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우윤근 의원은 “이번 사태 수습책과 관련, 문 대표에게 맡겨놓고 좀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기가 30분 늦게 시작됐으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 당내의 뒤숭숭한 상황을 반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安, 與 공천률 변수 급부상

‘안풍’ 우려...결선투표·전략공천 재검토 가능성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이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률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떠올랐다.

안 전 대표가 이끌 신당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대거 영입으로 세력을 키우고 여당 내에서 소외된 인사들을 끌어당길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 확보는 총선 목표에 ‘안철수 신당’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파 간 핵심 쟁점인 결선투표 도입과 전략공천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우선 최고위원들이 잠정 합의한 결선투표 도입 여부와 실시 조건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로 발돋움하고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 천정배 의원 등과 손잡으며 제1야당을 위협할 세력으로 부상할 경우, 경선 부작용이

큰 결선투표를 여당에서 실시하는 것은 야권에 더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14일 “경선 판세가 불리한 출마 예상자가 경선 참가를 포기한 채 자신의 조직을 이끌고 신당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선 참가자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계란을 깨뜨리는 꼴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와 더불어 전략공천 문제 역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무성 대표는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지고 ‘안풍(安風)’이 거세진다면 상황식 공천만 해서는 야권에 밀리는 지역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막판 ‘야권 연대’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전략공천 불가피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

‘고심’의 김한길계

비주류 탈당·투쟁 기로...“생각할 시간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 탈당으로 극도의 혼란 상황에 빠진 가운데 이른바 ‘김한길계’ 인사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 비주류 내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김한길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의 선택에 따라 비주류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하느냐, 비주류들이 당내 투쟁에 집중하느냐 여부가 판가를 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정계개편 과정에서 23명의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을 감행, 신당 창당을 주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14일 국회 의원총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야권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깊다”며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안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야권 통합을 위해 어렵사리 모셔온 안 의원을 막무가내 패권정치가 기어오 내뿜고 말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이날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도부체 개편 등 내부 투쟁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과 탈당 파에 힘을 실으며 연세 탈당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대표가 (통합 과정에서) 안 전 대표에게 밋진 것이 있다”며 “김 전 대표가 (안 전 대표의) 신당 쪽으로 올 것이 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 전 지사, 安·千에 러브콜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4일 또 다른 신당 세력인 안철수·천정배·박주선 의원들에게 “하나의 신당을 만들자”며 회동을 제안했다.

가칭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박 전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세력들이 마음을 비우고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신당을 만드는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앞서 통합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의원은 지난 10일 “신당 추진 세력들이 통합신당 추진에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원상 통합을 위한 통합발기인대회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	--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